

선관위, 광주 광산갑 불·탈법 당원 모집 칼 빼들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전수조사 이어 관심 지역구 지정 예방·단속 활동 강화 몰밀 선거운동 가장 치열한 서구갑도 지정...“광역조사팀 투입해 조사”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 간 몰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광산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불·탈법 모집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수조사에 나선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도 광주 광산갑과 서구갑을 관심 지역구로 지정했다. 특히 광산갑은 지난 7월까지 신규 모집된 1만여명의 권리당원 중 9000여명이 전수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관심 지역구로까지 지정됨에 따라 내년 총선 판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제적 예방·단속 활동과 단속 역량을 집중하려 광산갑과 서구갑 선거구를 관심 지역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8일부터 이 지역에서 집중 예방·단속 활동을 한다. 또 선거 범죄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집중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관심 지역구 지정에 대해 광주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정당·입후보 예정자 간 경쟁 구도, 위법 행위 발생 빈도, 신고·제보 등 단위 지표를 측정하고 지역구별 선거 정황을 고려·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갑은 불법 권리당원 모집 등의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가 빈번, 선거 과열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지역 한 정치 관계인이 제출한 권리당원 입당원서 수십여장의 필체가 동일해 광주시당이 경고를 했으며, 한 주소지에서 무더기로 입당원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광산 지역구에 접수된 상당수의 권리당원은 광주·전남 이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 민주당은 해당 권리당원이 광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지 등의 ‘지역구 활동 여부’도 점검하고 있다. 심지어는 충청도와 경기도 등지에 주소지를 둔 일부 유권자들은 광주시당에 전화를 걸어 “나도 모르게 민주당 광산갑 지역구 권리당원으로 신청했

다”고 잇달아 항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당은 대리 접수된 광산갑 입당원서 전례를 반례하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한 입당원서만 제21대 총선 권리당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타인을 통해 접수된 입당원서는 모두 전수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 광산갑지역위원회 이용빈 위원장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는 광산갑 출마를 준비하는 한 입지자가 구태·적폐 정치 공약과 선거 공식에 매몰돼 탈법적 당원 모집으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면서 “전수 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내기도 했다.

서구갑은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지도 제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전반적인 측정지표가 광주지역 8개 지역구 중 가장 높았다.

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관심지역구 2곳에 대해서는 선거범죄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관심지역구는 선거구 확정 상황, 각 정당의 당내 경선 실시에 따른 선거과열 등 선거 정황에 따라 추가 지정에 단속이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선관위 이명행 사무처장은 “공천 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설치·운영, 선거보로써 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확대·투입해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다”며 “위반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앞서 4만1000여명의 권리당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5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불·탈법으로 모집된 당원을 찾아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직접 주재...경제 챙기기 박차

‘조국 정국’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생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제 분야 장관들을 정부 서울청사로 소집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번 회의 주재는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 일정으로 국

내를 비운 시점임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장관들을 소집해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반복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마중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SOC 투자를 포함,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 21일 전남지역 의견 청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선거법 개혁안이 확정되면 광주·전남에서는 국회의원 의석 4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자리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이 참석해 지리적 여건, 교통 등 지역 사정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김병록 목포대 교수, 김신규 목포경찰서 공동대 표, 김태성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정욱기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정인수 전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 정일권 민주당 전남도당 조직국장, 차용석 자유한국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기 어렵지만 내년 총선까지 시한이 촉박함을 감안, 전남 등 7개 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 SRF, 주민 소통 미흡...불신해소 방안 찾아야”

국회 환노위 위원들 나주 현장 방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반발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나주 고흥폐기물 열병합발전소(SRF)와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용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4명은 17일 오후 현장 시찰을 위해 나주시 삼포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를 찾아 SRF 시설 현황 등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반면, 공사 측은 2017년 시운전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보다 낮게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가동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주민참여형 환경 영향성 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등을 필자로 한 기본합의를 체결한 것을 두고 성공사례로 자평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주거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강과 재산에 피해가 없는 양호한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지금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시설이 노후화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지 검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요원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면 불신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기본합의와 관련해 “환경 영향성 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주민이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조사와 별개로 주민 수용성



17일 오후 전남 나주시 삼포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를 또 한다는 게 이번 합의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나주 SRF 발전소는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한 연료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열병합발전소는 30만㎡ 이상 택지가 조성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무설치대상인 점을 감안해 소각장 대신 27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7년 12월 나주 혁신도시에 지어졌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연료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껏 멈춰선 상태다.

하지만 지난달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기본 합의에 도달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다. 기본 합의에는 ▲시민참여형 환경 영향성 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 보전 방안 등이 담겼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가을에 떠나는 고흥 거금도 자전거 여행

일 시 : 2019년 11월 2일(토) 오전 8시20분 1청사 집결

장 소 : 고흥 소록도 거금도 일주 (관광버스로 소록도까지 이동)

1코스	거금휴게소	익금해수욕장	월포마을회관	거금대교	소록도(42km)
2코스	익금해수욕장	월포마을회관	거금대교	소록도(30km)	

모 집 기 간 : 10월14일~30일 (선착순 100명)

참 가 대 상 : 전라남도 도민 및 청소년 (초등은 부모님 참가시 5학년이상 가능함)

참 가 비 : 무료 (점심, 간식, 기념품제공)

준 비 물 : 자전거, 헬멧, 장갑, 편안한 복장

접수 및 문의 : 여수YMCA 회원사업부 061)642-0001, 010-9228-7245

알 림 1) 거금도 특성상 오르막 내리막구간이 많아 자전거를 잘 타는 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2) 행사중 안전사고는 본인에 책임이므로 개인보험가입을 권장합니다.
3) 주최측 행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되며 음주라이딩을 절대 안됩니다.

| 주최 | 전라남도 | 주관 | 여수YMCA | 후원 | 光州日報